

주제2. 현대사회의 인권

**오늘날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에
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사회의 인권들...



1. 인구의 도시 집중

-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대기 오염 → 환경권
 - 도시의 주택 부족, 농촌의 빈집 증가 → 주거권
 - 범죄 증가, 각종 시설물에 의한 사고 → 안전권
-

환경권

의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리는 권리
성격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국민의 의무
보장 노력	「환경 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기업가 등의 환경 보전 노력 규정,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등 환경 관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관련헌법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주거권

의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배경	주택 부족, 불안정한 주거 생활 등
보장 노력	「주거 기본법」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 최저 주거 기준 설정 등으로 주거 약자 지원 노력
관련 헌법	제 35조 ③ 국가 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주거 기본법



주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주거 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최저 주거 기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가구당 면적, 방 개수, 화장실, 부엌 등의 면적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SCOOP 질문]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m²... 이쯤되면 '직무유기'

✎ 최아름 기자 | ⌚ 입력 2022.07.12 | 📄 호수 501 | 💬 댓글 0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괜찮나
일본 25m², 싱가포르 23m²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들

주거급여 소개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의 관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언론 자료:캥거루족 68%는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다”

—매일경제,2024.3.16



출처: 매일경제, 2020년 자료



출처: 사람인, 2018 자료

안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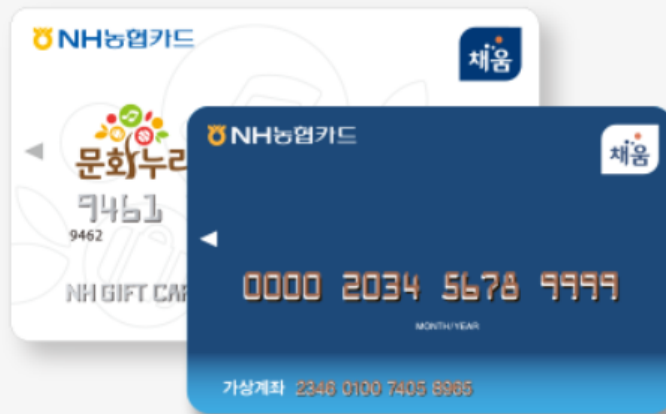
의미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배경	자연재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위험 증가
보장 노력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 노력,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노력 유도 등
관련 헌법	제 34조 ⑥ 국가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생활 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 문화권

○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3. 정보 사회의 발달 정보의 소유 및 접근 과 관련한 인권 → 잊힐 권리

